

+ POSRI 보고서

이란 총선 이후, 개혁 · 개방정책 본격화

서상현 수석연구원, 글로벌연구센터(unisa21@posri.re.kr)

[목 차]

1. 이란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
2. 이란 경제전망과 주요국의 이란 시장 선점 경쟁
3. 이란 진출 리스크 요인들
4. 시사점

Executive Summary

- 2월 26일에 치러진 이란 총선과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선거에서 개혁·중도파가 우위를 차지한 것으로 이란 선거관리위원회 및 외신들 발표
 - 총선 결과 수도 테헤란에서 전체 의석 30석을 개혁·중도파가 차지하는 등 선전하였고, 이란 최고지도자를 임명하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의원 선거에서도 개혁·중도파가 총 88석 중 52석(59%)을 차지
- 개혁·중도파의 선전으로 향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개혁·개방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
 -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추려는 로하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
 - 그러나 영향력이 큰 군부 및 종교분야에서는 여전히 보수파가 장악하고 있어 개혁·개방을 둘러싼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충돌 가능성도 높음
- 국제사회의 제재해제(1월 16일)에 이어 총선에서의 개혁파 승리로 이란의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가 예상되면서 이란 경제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
 - 제재해제로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,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이란에 많은 관심을 보인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23일, 이란 제재 해제 뒤 외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하여 무역 및 투자증대 방안을 논의함
 - 한국정부도 2월 29일 ‘한-이란 경제공동위원회’를 통해 건설·플랜트·에너지·산업·금융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음
- 반면, 이란 보수 강경파의 영향력 상존, 현지 진출 외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 정치·경제 리스크도 존재

〈이란 비즈니스 리스크〉

정치 리스크	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한 보수강경파의 저항 등 정치 불안정
경쟁사 리스크	유럽社의 선진기술, 중국社의 저가공세 강화 등
비즈니스 리스크	이란內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 입찰시 파이낸싱(PF) 필수

- 이란은 제재이전 국내기업들의 주요 시장 중 하나였으며 제재해제를 계기로 사업기회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
- 이란시장의 효과적인 재진출을 위해서는 ① 유능한 에이전트 확보, ② 자금 확보를 위한 MDB(Multilateral Development Bank) 및 정책금융 활용, ③ 이란의 법과 제도 숙지, ④ 이란의 핵 협상 위반시 제재 재개에 대한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대응책 마련 필요

1. 이란 총선 결과와 향후 전망

□ 2월 26일에 치러진 이란 총선과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선거에서 개혁 및 중도파가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며 승리

- 최종 개표결과 당선이 확정된 221명 중 강경보수파 성향 후보 103표, 개혁·중도파 성향 후보가 113명 그리고 소수민족 할당이 5석으로 분석
 - 특히 개혁·중도파는 수도인 테헤란에서 30석 전체를 석권하는 등 도시에서 강세를 보였으며, 반면 강경보수파는 농촌지역에서 강세를 보임
 - 총선결과 이란 정치, 경제, 사회 분야 등에서 핵 협상을 주도했던 개혁파의 입김이 강화될 전망
 - 290석 중 나머지 69석은 4월 결선투표에서 결정(*이란은 각 선거구에서 당선 순위 안에 들었어도 득표율이 25%를 넘지 못하면 다득표 순으로 2명이 결선투표 치름)
 - 이란 최고지도자를 임명하는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(88명) 선거에서도 개혁·중도파가 총 88석 중 52석(59%) 점유
 - 테헤란에서 선출하는 16명 가운데 개혁파가 15명을 차지, 반면 강경 보수파 인사는 1명만 당선
 -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의 임기는 8년으로 이번에 선출된 위원들이 현재 77세 고령인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후임 최고지도자*로 개혁적인 인물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음
- *최고지도자는 행정부, 입법부, 사법부, 혁명수비대 등 국정전반에 걸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도 임명

□ 이번 총선과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 선거에서 개혁·중도파의 선전으로 하산 로하니 대통령의 개혁·개방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

- 지난 해 7월 서방과의 핵 협상 타결을 이끈 로하니 대통령은 반대파인 강경파의 의회 내 세력이 줄어들면서 향후 경제 개방과 일련의 개혁 정책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

〈개혁·중도파의 향후 정치, 경제, 외교 정책방안〉

정치	- 로하니,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 도전 - 개혁중도파 세력 결집을 통해 정권 공고화 - 하메네이 퇴임 이후 차기 최고지도자 인물 개혁파에서 선출
경제	- 외국의 대이란 투자 적극 유치로 경제성장률 높임 -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

외교·안보	- 실용주의 노선 강화로 유럽 등 서방과 협력 - 시리아, 이라크 등 시아파 정권과 연대강화 및 IS 격퇴 지원 → 중동 패권을 놓고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와 충돌 가능성 높음
-------	--

그러나 로하니 대통령과 개혁파인 라프산자니 전대통령 등도 보수성직자 출신이며 농촌 등에서는 여전히 강경보수주의 영향력이 커 점진적인 개혁·개방 정책이 예상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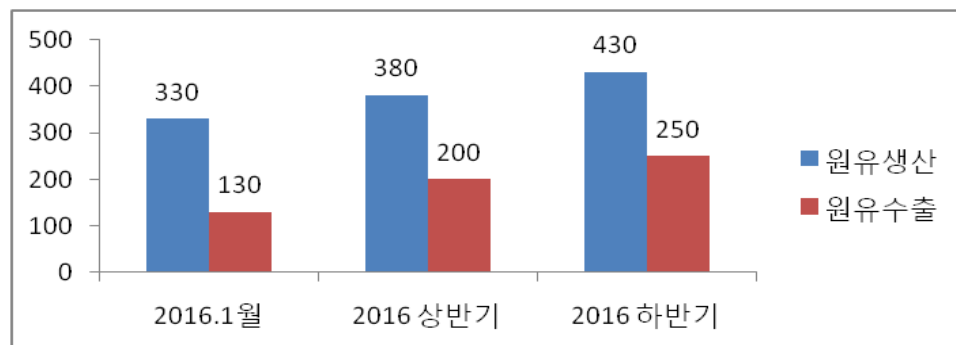
2. 이란 경제 전망과 주요국의 이란시장 선점 경쟁

□ 국제사회의 제재해제(1월 16일) 및 선거에서의 개혁파 승리로 외국인 투자유입 확대가 예상되는 등 이란경제에 긍정적 영향 기대

- 이란경제는 2016년 4.4%, 2017년 6.1% 등 중단기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(EIU, 2016)
 - IMF는 2016년 이란 경제성장률을 4.5%, Global Insight는 3.5% 전망
- 그 동안 금융제재로 외환부족에 시달렸으나 제재 해제로 최대 1,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동결자산의 이란 내 유입이 가능해졌으며, 또한 원유의 본격적인 수출을 통해 연간 약 600억 달러의 외화 획득도 가능
 - 원유 수출 확대를 위해 이란은 일일 평균 원유 수출량을 2월 현재 130만 배럴에서 7월까지 200만 배럴, 하반기까지는 250만 배럴로 늘릴 계획
 - 최근 이란은 프랑스 토탈과 러시아 기업들을 통해 이란산 원유의 유럽 수출을 본격화 하였음

〈이란 원유 생산 및 수출 계획〉

(만 배럴)



출처: World Energy Market Insight, 2016. 1.29

- 제재해제로 석유 및 가스 등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, 철강 등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이란의 6차 5개년 개발계획(2016~2021)에 따르면, 이란의 개발 우선순위산업은 ①석유 및 가스 ②발전 ③수자원 ④자동차 ⑤관광 등의 순위
- 잔가네 이란 석유부 장관도 “정부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업스트림(유전 탐사·생산) 부문에 1,300억 달러, 다운스트림(정유·석유화학)에 700억 달러가 필요하다”며 외국인투자의 중요성을 강조
- 또한 자동차, 철강, 화학 등 탈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됨

□ 미국과 EU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의 이란 시장 선점 움직임이 활발함

- 특히 중국과 러시아, 브라질 등 신흥국 경기가 가라앉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 및 기업들은 이란 시장 진출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
 - 이란은 제재해제로 생필품 등 소비재, 자동차, 기계, 의약품, 발전소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최근 이란 로하니 대통령은 유럽 방문 중 114대의 에어버스를 주문하였으며, 유럽의 철강 플랜트업체(Danieli)와 자동차사들(푸조, 르노, 닛산 등)도 이란 진출을 발표
- 이란에 많은 관심을 보인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지난 1월23일, 이란 제재 해제 뒤 외국 정상으로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
 - 양국은 ‘전면적 전략동반자관계’ 선언을 통해 산업, 문화, 법률 등의 분야에서 25년간 17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교역규모를 10년 안에 현재의 11배인 6천억 달러로 늘리기로 합의
 - 중국은 상품 교역뿐 아니라 원유·가스, 자동차, 원자력, 광업, 철도 등 이란 재건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며 이미 이란 내 테헤란~마슈하드 간 926km 고속철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하여 착공
- 유럽국가들 중에는 독일과 프랑스, 이탈리아 등이 이란 진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,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 1월 프랑스, 이탈리아 등 유럽을 순방
 - 독일은 지난 해 부총리와 주요 자동차 기업 임원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방문해 이란과의 협력방안을 논의
 - 프랑스도 지난 해 경제부총리가 이란을 방문한 데 이어, 올 해 로하니의 프랑스 방문 시 푸조는 이란에 4억 유로를 투자해 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발표
 - 이탈리아는 로하니 대통령의 이탈리아 방문 시 석유, 철강, 자동차 사업 관련 170억 유로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

- 일본 또한 총리 특보를 이란에 파견해 이란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도 계획하고 있음
 - 일본정부는 이란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기업들의 이란 진출환경을 개선하는 등 이란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을 적극 제공하기로 함
 - 또한 일본은 이란의 개발사업 투자를 위해 100억 달러까지 신용융자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이란에 대한 파격적 금융지원도 제공
- 한국정부도 이란진출 기업을 위한 정부정책금융 지원발표와 ‘한-이란 경제공동위원회’(2월 29일) 등을 통해 이란시장 진출 본격화
 - 동 회의를 통해 한국과 이란은 건설·플랜트·에너지·산업·금융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상호 협력 강화 합의

3. 이란진출 재개를 위한 리스크 점검

□ 제재해제 이후 이란에 대한 관심 증대로 많은 기업이 이란진출을 고려하고 있으나, 보수 강경파의 여전한 영향력과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 정치·경제 리스크도 존재

- ① **이란의 정치 리스크:** 총선 이후 정치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당분간 보·혁간의 권력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 - 개혁·중도파의 총선 및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선전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 개혁경제정책을 펼칠 전망
 - 총선 이후 로하니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자동차 산업의 민영화를 밝히는 등 경제개혁을 언급함
 - 그러나 이란 정치, 경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혁명수비대*를 보수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등 강경보수파들의 저항도 거세질 전망
- * 군사조직이지만, 댐·통신·가스전 개발 등 이권사업 장악한 ‘이란판 올리가르히’

- ② **이란의 미국 및 GCC국가들과의 관계악화 등 국제정세 리스크:**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의 이란제재 지속 요구 및 이란의 GCC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 등 국제정세 리스크 상존
- 미국의 대이란 제재유보는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된 사항에 국한되며 탄도미사일 기술 및 인권·테러 관련 제재는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음

- 또한 2016년 12월 美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핵 합의를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음
- 공화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선두를 달리는 도널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이란 핵 합의 약화를 공약으로 제안한 상황

○ 시리아와 예멘에서 충돌하고 있는 수니파의 사우디와 시아파의 이란 간 관계 악화도 이란 사업 수행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

- 두 국가간의 직접적 충돌 가능성은 적지만, 지속적인 긴장관계는 양국에서 수행하는 비즈니스의 리스크로 부상할 수 있음

☞ 다만, 종파갈등은 정치적인 문제일 뿐 비즈니스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음 → 아직 중동진출 기업들 중 종파갈등에 의한 직접적 피해는 없음

③ 경쟁국 및 경쟁사 리스크: 주요 경쟁국 및 경쟁사로는 이란 진출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

○ 중국과 이란의 2014년 교역액은 약 520억 달러 규모로 이란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음

- 이란은 저가제품 수요가 높아 중국산 철강, 가전, 자동차 등의 이란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
- 이미 중국 건설사들은 이란에 신규 건설될 5개 원자력 발전소 중 3개에 참여하는 등 한국 건설사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

○ 유럽의 건설 및 자동차 업체들의 이란 시장 재 진출 역시 국내 기업들에게는 위협요소임

- 제재이전 이란 플랜트시장의 절반이상을 유럽업체들이 점유한 바 있고, 자동차 역시 유럽업체들이 높은 시장 지배력을 확보

④ 비즈니스 리스크: 최근 바뀌고 있는 비즈니스 관련 법률과 금융확보 등 이란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

○ 예를 들면, 자원개발부문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기존 바이백(Buy Back)* 방식을 대체할 새로운 석유계약방식의 도입이 예상

- 또한 이란은 GCC국가들과는 달리 외화가 부족하여 프로젝트 입찰 시 프로젝트 파이낸싱(PF)을 마련한 후 입찰 가능

* Buyback 제도: 유전개발에 성공한 외국기업이 소유 운영권을 이란정부에 이양하고 수익금만 받는 방식

4. 시사점

□ 이란은 원유 등 풍부한 자원과 8천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유망한 소비시장으로 한국기업들의 중요한 시장 중 하나

- 제재 본격화 이전 대이란 수출은 62억6천만 달러(2012년)였으며 세계 6대 건설시장 중 하나였음
 - 제재해제 이후 국내 기업들은 제철소와 화력발전소 그리고 담수 플랜트 건설 등을 위한 MOU 체결 등 이란진출이 재개되고 있음
 - 이 밖에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란과의 경험강화 등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이란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

□ 그러나 제재해제 이후 이란 시장환경은 유럽국가와의 치열한 경쟁, 중국산 저가공세 등 이전과 다른 변화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

- 첫째, 무역 업무대행 에이전트와의 신뢰관계 구축
 - 대이란 수출거래를 위해서는 최종 수입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란 내 수입 승인 절차 등을 대행할 에이전트와 계약이 필수적
 - 특히 최근 이란 진출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유력한 에이전트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며, 에이전트와의 계약시 반드시 문서로 진행해야 함
- 둘째, MDB 및 정부 정책금융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활용 등을 통한 자금 확보
 - 수출입은행은 한국 기업의 이란시장 선점을 위해 70억 유로 규모의 ‘맞춤형 금융패키지’(2월 19일)를 마련하였고, 2016년 상반기 중 수출입은행과 이란 상업은행간 50억 유로 규모의 대출약정도 체결 예정
 - 일본 자금활용은 이미 수년 전 대우건설이 오만 화력발전소 공사 때 일본은행과 PF를 일으켜 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있어, 일본 종합상사들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일본자금 조달 방안 모색도 필요
- 셋째, 이란 시장은 아직 법적, 제도적 미비점과 만연한 관료주의 등으로 조급한 진출보다는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응력을 마련한 이후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이란은 여전히 조세, 노동, 회계 법규의 내용과 적용이 불투명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금융 제도도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

- 넷째, 이란과 사업 계약시 ‘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복원되면 배상금 없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’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등 서방의 제재 재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함
 - 핵 협상 타결시 ‘만약 이란이 타결안을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’는 snapback 조항이 있음

[참고자료]

[보고서]

신상윤, “이란 경제제재 해제에 따른 영향 및 시사점”, World Energy Market Insight, 2016.1.29

수출입은행, “이란 진출전략 세미나”, 2016.1.16.

[언론]

연합뉴스, “이란 총선 개혁파 약진으로 로하니 개방정책 힘 실린다”, 2016.2.29

노컷뉴스, “이란 진출 앞둔 건설사들 '다은행 잡아라', 2016.1.18

The Telegraph, “Iran rejected 'confrontation' says Hassan Rouhani as allies win 90 seats”, March 02, 2016.